

제주, 음식물쓰레기 부지 확정 "또 미뤄지나"

진순현 기자 (jinjin@ajunews.com) | 등록 : 2015-04-01 12:52 | 수정 : 2015-04-01 12:52



▲제주시가 구좌읍 동북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사진 참조) 인접지인 조천읍 북촌리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입지 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내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약 140여t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해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광역시설의 입지를 확정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당초 시는 쓰레기 소각·매립장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입지로 구좌읍 동북리를, 그리고 지난해 4월 인접지인 조천읍 북촌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해 일대를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었다.

북촌리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시설이 유치되면 주민특별지원금 151억원을 주겠다고 3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열어 약속했고, 158명의 주민에 대해서는 선진환경시설 견학 등을 보내며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

아울러 주민들이 바라는 방파제 보수사업 등 모두 11개 사업에 13억여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촌리 마을은 주민의견을 수렴, 지난달 말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1일 현재, 아직까지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유인 즉 마을회 소유의 석산개발지역 6만여㎡를 활용해 시설을 유치하자는 찬성 측과 음식물 처리시설 마을에 둘 수 없다는 반대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 따라 이 시설의 입지를 북촌리 외에 다른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기로 선회했다. 시 관계자는 “국비절충 등 행정절차 이행을 감안하면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시설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690억원을 투입, 하루 300t 규모의 처리 용량을 맞출 계획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음식물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로 시간당 1.8MW의 전력을 생산해 연간 31억원의 전력판매수익을 올리고, 하루 23t의 퇴비를 생산·판매해 83억원의 세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 생산